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2018. 11. 29(목) 09:40~12:00
국회 의원회관 2층 제4간담회의실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 개요

- 주 제 :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 일 시 : 2018. 11. 29(목) 09:4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4간담회의실
- 주 최 : (재)여의도연구원

□ 프로그램

개회식	
인 사 말	김선동 여의도연구원 원장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사 회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 실장
발 제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 연구위원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
토 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 연구위원

■ 인사말

| 김선동 여의도연구원 원장

■ 토론회

사회

|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 실장

발제

1. 2019년 세계경제 전망 ————— 1

|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 연구위원

2. 2019년 한국 경제 전망 ————— 17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

토론

- 1.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39
- 2.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3
- 3.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61
- 4.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 연구위원 71

최근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와는 달리, 우리 경제는 2017년 2분기를 정점으로 경기 하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 OECD, KDI 등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극심한 투자 위축과 소비 부진, 노동생산성 정체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과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 우려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의 포기,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친노동 정책기조와 분배에 경도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이러한 우리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i노믹스」라는 경제담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여의도연구원에서는 대내외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 돌파를 위한 해법들을 숙의해보기 위해 저명한 경제전문가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발제와 토론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님, 그리고 오정근 하나금융ICT융합학회 회장님, 이인재 인천대학교 교수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님,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11월 29일

김 선 동
(재)여의도연구원 원장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발제 1

2019년 세계경제 전망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 연구위원

2019년 세계경제 전망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 연구위원

2019년 세계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년 11월

CONTENT

I 세계경제 전망 개관

II 주요국 경제전망

I 세계경제 전망 개관

1. 2019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세계경제 전망

KIEP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2018년 11월

(단위: %)



주: 1) PPP 기준.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KIEP 전망치, IMF WEO(20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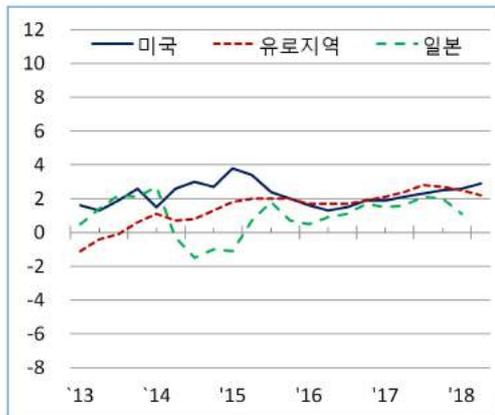
4

1. 2019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선진국



자료: Bloomberg.

신흥국



자료: Bloomberg.

5

1. 2019년 세계경제 전망

글로벌 경기회복세의 둔화

미국, 유로지역, 일본 모두 2018년 대비 낮은 성장을 전망

- 미국 세제개편 효과의 점진적 감소와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로 하방압력 가중
- 유로지역은 역외수출증가세 둔화와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가시화
- 일본은 기업의 비용상승, 통상마찰에 따른 수출감소, 소비세율 인상 등에 노출
- 선진국에서 고용시장의 호전이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임금 상승폭은 제한적

신흥국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거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향

- 중국은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 등 하방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
- 러시아와 브라질 등은 자원 가격의 회복과 함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으나, 서방제재와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 인도는 개혁정책의 혼란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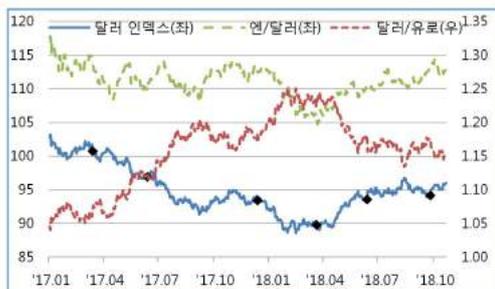
1. 2019년 세계경제 전망: 국제금융시장

미국 달러화 강세 유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에 따라 달러는 강세를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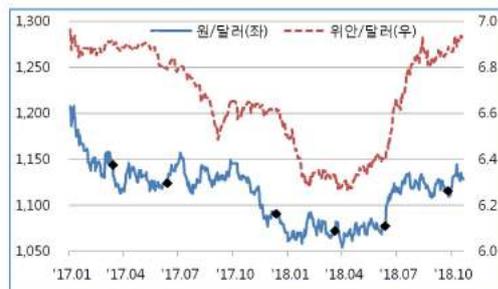
- 미국 중간선거, EU의 이탈리아 예산안 평가, 브렉시트 협상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소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주요국 통화 강세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미·중 통상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무역긴장 장기화로 달러 대비 신흥국 통화가치의 약화 예상

달러 인덱스, 달러/유로, 엔/달러



자료: Bloomberg.

원/달러 및 위안/달러



자료: Bloomberg.

7

1. 2019년 세계경제 전망: 국제금융시장

주요국 국채 금리 완만한 오름세 속 변동성 확대

- **선진국의 국채금리는 미 금리인상으로 지속적인 오름세**
 - (미국)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상승압력 심화 전망
 - (유로지역 및 일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동조화하며 상승세 전망
- **신흥국은 자본유출우려와 정치·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변동성 심화 전망**



주요 투자은행의 금리 전망

(단위: %)

		'19.Q1	'19.Q2	'19.Q3	'19.Q4
미	기준금리	244~27	265~29	28~305	286~31
	10년 물	3.26	3.33	3.36	3.41
유로	기준금리	0.00	0.00	0.00	0.00
	10년 물	0.74	0.87	0.97	1.07
일본	기준금리	-0.1	-0.1	-0.09	-0.08
	10년 물	0.14	0.15	0.15	0.16

주: 주요 투자은행 대상 10월 조사 중간 값. 자료: Bloomberg. 8

1. 2019년 세계경제 전망: 국제상품시장

유가의 추가적 상승은 제한적이나 리스크 상존

- **공급불안우려로 높은 수준을 유지, 미 원유공급 증가로 추가적 상승은 제한적**
 - 이란, 베네수엘라의 공급 감소는 다른 산유국의 공급으로 대체 전망
 - 다만 미·중 통상분쟁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시 원유수요 둔화 가능성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



세계 원유 수급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수요(A)	98.55	100.07	101.56
└OECD	47.23	47.58	47.94
└비OECD	51.23	52.50	53.63
공급(B)	97.71	99.87	101.84
└비OPEC	58.42	60.83	63.10
└OPEC	39.29	39.05	38.74
초과공급(B-A)	-0.84	-0.20	0.28

자료: EIA(2018년 10월), Short-Term Energy Outlook. 9

1. 2019년 세계경제 전망: 국제상품시장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 하락세

➤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가 비철금속과 곡물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

- 무역갈등 품목의 범위 확대와 전개상황에 따라서 변동성도 확대
- 알루미늄은 러시아 Rusal사에 대한 제재 유예조치 종료('18.12.12)후 공급불안 가능성



1. 2019년 세계경제 전망

하방 리스크의 가시화 가능성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ECB의 양적완화 축소
- 신흥국에서는 통화불안·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로 통화긴축 고려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넘어서는 장기 전략의 충돌
- 글로벌 교역 감소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 가능성

신흥국 중심의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 가능성

- '18년 초 세계경제 성장 기대와 위험선호 현상으로 신흥국으로 자금유입
- 글로벌 리스크의 가시화로 신흥국 위험 증대 및 안전자산 선호 시현 가능성

II 주요국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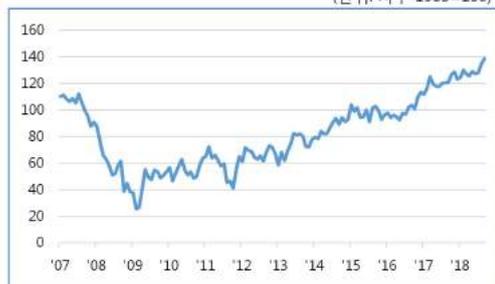
2. 주요국 경제 전망: 미국

2018년 미국경제의 견조한 성장

- **세계개혁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로 민간소비 성장**
 - 가처분소득 증가, 미국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 소비심리 증가
- **고용지표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임금 증가의 으뜸세는 둔화**
 - '18.9월 미국 실업률은 3.7% 기록하며 '70년 이래 최저 실업률 기록
 - 다만, 실질임금 증가가 가처분소득 으뜸세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함.

미국 소비심리지수

(단위: 지수 1985=100)



자료: 컴퍼런스보드

미국 경제성장률(지출부문별)

(단위: 십억 달러, %)

지출부문	2017		2018	
	3/4	4/4	1/4	2/4
실질GDP	2.8	2.3	2.2	4.2
소비지출	2.2	3.9	0.5	3.8
민간투자	8.8	0.8	9.6	-0.5
수출	3.5	6.6	3.6	9.3
수입	2.8	11.8	3.0	-0.6
정부지출	-1.0	2.4	1.5	2.5

자료: 미 상무분석국.

2. 주요국 경제 전망: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 경기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될 전망

- 2018년 3차례 인상 현재 기준금리 2~2.25%
- 근원PCE가 연준목표치인 2%에 근접

▶ 연준의 자산 축소도 완만하게 진행

- 2018년 9월 말 현재, 연준 총자산 2017년 10월 초 대비 6%감소



2. 주요국 경제 전망: 미국

2019년 미국경제 2.3% 성장 전망

▶ 세제개혁 지속 시행에 따른 세수감소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 악화 심화

▶ 경제성장에 힘입은 금리인상에도 주식시장 호조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급락

- 금융시장의 변동성 상승 및 장단기 금리차 축소
- 미·중 통상분쟁이 한동안 지속될 예상이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도 부담



2. 주요국 경제 전망: 유럽

유럽의 회복세의 둔화

- 역외 수출 증가세의 둔화 및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대외부문 부진
- 일시적 요인에 의한 내수 위축으로 상반기 성장세 둔화
 - 프랑스의 대규모 파업과 영국의 기상 악화
- 2019년 유로지역은 1.8% 성장 전망
 - 수출 증가세 둔화와 브렉시트에 의한 불확실성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2017년					201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유로존	0.7	0.7	0.7	0.7	2.4	0.4	0.4
- 독일	1.1	0.5	0.6	0.5	2.2	0.4	0.5
- 프랑스	0.8	0.6	0.7	0.7	2.2	0.2	0.2
- 이탈리아	0.5	0.3	0.4	0.3	1.6	0.3	0.2
- 스페인	0.8	0.9	0.6	0.7	3.0	0.6	0.6
영국	0.4	0.3	0.4	0.4	1.7	0.1	0.4

자료: 유럽통계청.

유로지역 총수출액 및 에너지 수입액

(단위: %, 억 유로)



자료: 유럽통계청.

16

2. 선진국 경제 전망: 유럽

ECB의 양적완화 중단 가능성

- 자산매입 프로그램 2018년 말 종료 예상
 - 종료 후에도 만기상환 채권은 재투자 방침
-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2019년 상반기까지는 유지
 - 고용은 개선추세이나 근원 CPI상승률이 0.9%에 불과
 - 2019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현행 0% 수준으로 동결

유로존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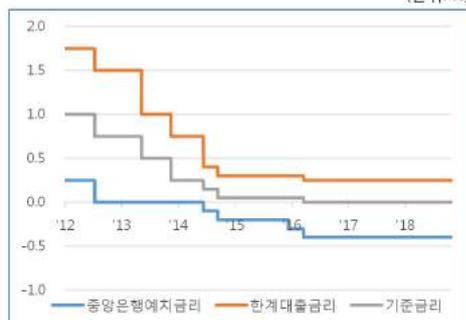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ECB

ECB 주요 정책금리

(단위: %)



자료: ECB

17

2. 주요국 경제 전망: 일본

2019년 일본경제 0.8%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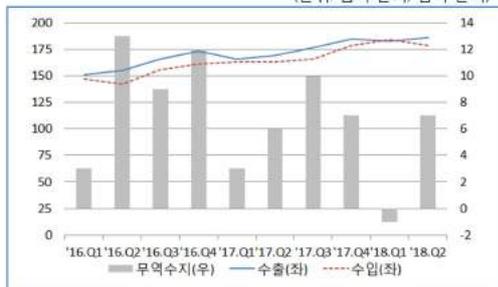
- 기업의 비용상승, 통상마찰에 따른 수출감소, 소비세율 인상 등의 하방압력 가중
 - 노동개혁 추진 및 생산인구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으로 고용상황 개선 속, 임금상승 미약
 - 미국의 통상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가능성
 - 아베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연기한 소비세율 인상이 '19.10월 시행될 예정

일본 GDP 항목별 성장 기여도 (단위: 전기대비, %p)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십억 달러, 십억 달러)



자료: JETRO.

18

2. 주요국 경제 전망: 일본

재정건전화 계획과 소비세율 인상

-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 예상 시기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
 - 소비세율 인상 시기가 2년 반 연기됨에 따라 세수 확충에 어려움
 - 금융완화·성장전략을 통한 실질GDP 성장률 2% 목표 달성 실패
 - 반복적인 추경예산의 편성과 집행
-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 계획: 8%→10%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 분의 절반을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사회보장 충실화에, 나머지를 고령화로 급증한 의료·간병비 충당에 관련된 채무 억제에 사용할 계획

재정건전화 계획 비교

항목	2015년 재정건전화 계획	2018년	2018년 재정건전화 계획
기초재정수지	2018년 1% 2020년 흑자 달성	2.9%	2021년 1.5% 2025년 흑자 달성
정부부채	흑자화에 따른 안정적 삭감	187.3%	2021년 180%대 전반
재정수지	재정수지에도 유의	4.4%	2021년 3% 이하
세출 억제	사회보장 관련 지출 증가액 5000억 엔 수준으로 억제		구체적 삭감 목표 수치 삭제 고령화 진전 정도에 따라 조절

주: 기초재정수지, 정부부채, 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
자료: 일본 내각부.

19

2. 주요국 경제 전망: 중국

성장의 완만한 둔화 지속

- 2018년 중국경제는 6.6% 성장하며 정부 성장률 목표치 달성 전망
- 소매판매는 9%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산업생산의 완만한 둔화와 고정자산투자의 부진 심화
 - 고기술제조업(11.6%)과 장비제조업(9.2%)는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
 - 첨단기술제조업 투자와 제조업 기술투자 증가율이 전체 제조업 투자를 견인
 - 국유기업 투자의 급격한 하락

3대 부문별 투자



자료: CEIC,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7	2018		
		1/4	2/4	3/4
GDP	6.9	6.9	6.9	6.8
소매판매	10.2	10.0	10.8	10.3
고정자산투자	7.2	9.2	8.6	7.5
수출	7.9	8.2	6.3	6.0
수입	15.9	24.0	14.2	14.6
산업생산	6.4	6.5	6.6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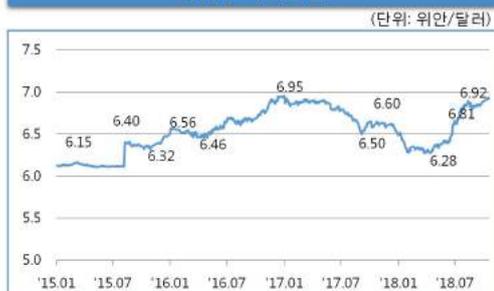
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누계치.
자료: CEIC, 중국 국가통계국.

2. 주요국 경제 전망: 중국

2019년 중국경제 6.3%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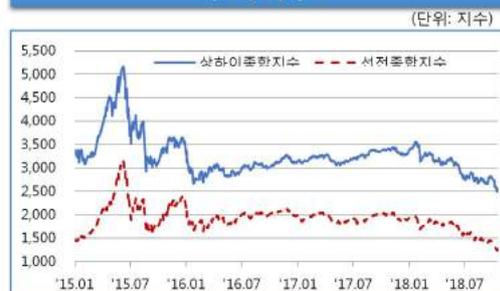
-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등 하방압력
-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
 - 지방정부는 채권발행을 통해 인프라 투자 지원할 예정, 부채 누적의 우려 상존
 - 지속적인 디레버리징 및 금융리스크 관리 조치를 통해 시장기대 관리가능 수준이라는 판단
- 위안화 약세와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도 제시

위안화 환율



자료: CEIC.

주가지수



자료: CEIC.

2. 주요국 경제 전망: 인도

2019년 인도경제 7.3% 성장 전망

- **고유가 지속과 미 금리인상 등의 하방압력 요인**
 - 고유가로 인한 관련 제품의 수입액 증가와 에너지 물가상승 압력
- **화폐개혁 및 GST 안착에 따른 상방압력 요인**
 - 모디 정부 개혁정책의 초기 도입 시 발생했던 혼란의 안정화

인도 부문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구성 요소 (GDP 대비 비중)	2017년				2018년	
	1/4	2/4	3/4	4/4	1/4	2/4
GDP 성장률	6.1	5.6	6.3	7.0	7.7	8.2
민간소비 (56)	4.2	6.9	6.8	5.9	6.7	8.6
정부지출 (11)	22.5	17.6	3.8	6.8	16.9	7.6
총고정자본형성 (31)	6.0	0.8	6.1	9.1	14.4	10
수출 (20)	7.0	5.9	6.8	6.2	3.6	12.7
수입 (22)	6.6	18.5	10	10.5	10.9	12.5
농림수산업 (15)	7.1	3.0	2.6	3.1	4.5	5.3
광공업 (31)	5.0	0.1	6.1	7.1	8.8	10.3
제조업 (18)	6.1	-1.8	7.1	8.5	9.1	13.5
서비스업 (54)	6.3	9.5	6.8	7.7	7.7	7.3

자료: CEIC.

인도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상승률



자료: CEIC.

22

2. 주요국 경제 전망: 동남아

2019년 아세안 5개국은 5.2%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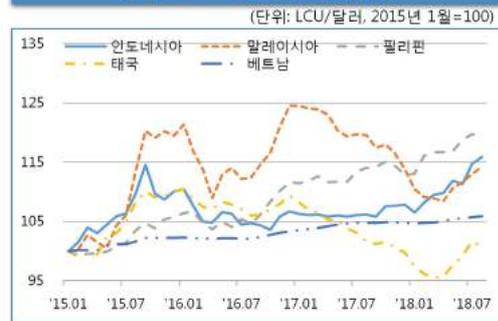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5.1→5.2%): (상방) 안정적인 민간소비 증가 등 (하방) 긴축통화정책, 중국성장둔화 등
- 말레이시아(4.7→ 4.6%): (하방) 인프라 취소·연기에 따른 투자 둔화세, 수출부진
- 필리핀(6.1→ 6.2%): (상방) 고용증대에 따른 민간소비 호조세,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 등 (하방) 수출 부진
- 태국(4.3→ 4.0%): (상방) 가계소득 증대에 기인한 민간소비 호조세, 인프라 투자확대 등 (하방) 고유가, 중국성장 둔화, 정치적 불안 등
- 베트남(6.7→ 6.5%): (하방) 국제경제 긴장 고조

동남아 주요국 실질GDP 성장률



주: 2017년 기준 아세안 내 GDP 비중(인도네시아 36.7%, 말레이시아 11.4%, 필리핀 11.3%, 태국 16.5%, 베트남 8.1%)

동남아 주요국의 환율



자료: IHS Markit.

23

2. 주요국 경제 전망: 러시아

2019년 러시아경제 1.4% 성장 전망

- 서방제재, 러 기준금리 추가인상, 부가세율 인상, 공공요금 상승 → 소비, 투자 성장세 둔화
- 다만 고유가 지속시 무역수지 흑자는 상방요인으로 작용



자료: 러시아경제개발부



자료: 러시아경제개발부



자료: 러시아경제개발부



자료: 러시아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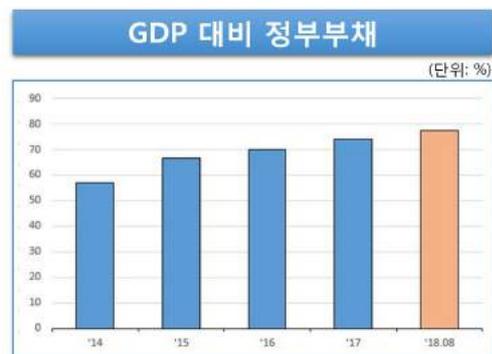
2. 주요국 경제 전망: 브라질

2019년 브라질 경제는 2.4% 성장 전망

- 소비와 투자의 완만한 회복세 전망
 - 트럭 운송부문의 파업의 여파, 높은 실업률, 낮은 노동생산성, 비공식부문 고용의 높은 비중(전체 노동력의 50%)이 하방요인
- 대외신용도 회복을 위한 재정개혁 성공여부가 불확실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감사합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발제 2

2019년 한국 경제 전망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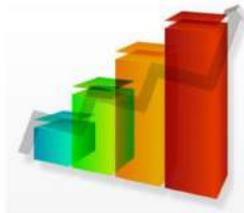
2019년 한국 경제 전망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

2019년 한국 경제 전망
- 여의도연구원

2018.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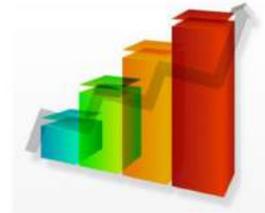
경제연구실장
주 원 이사대우



 현대경제연구원

주요 목차

- 1 최근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
-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3 시사점



1 최근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



① 현 경기 국면 판단

1. 최근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

- **현 한국 경제는 2017년 2분기를 정점으로 1년 이상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경기순환주기상 2017년 5월이 경기 정점으로 판단
 -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 수축 국면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 통계청은 2009년 2월(저점)에 시작하여 2013년 3월(저점)에 종결되는 제 10순환기까지만 공식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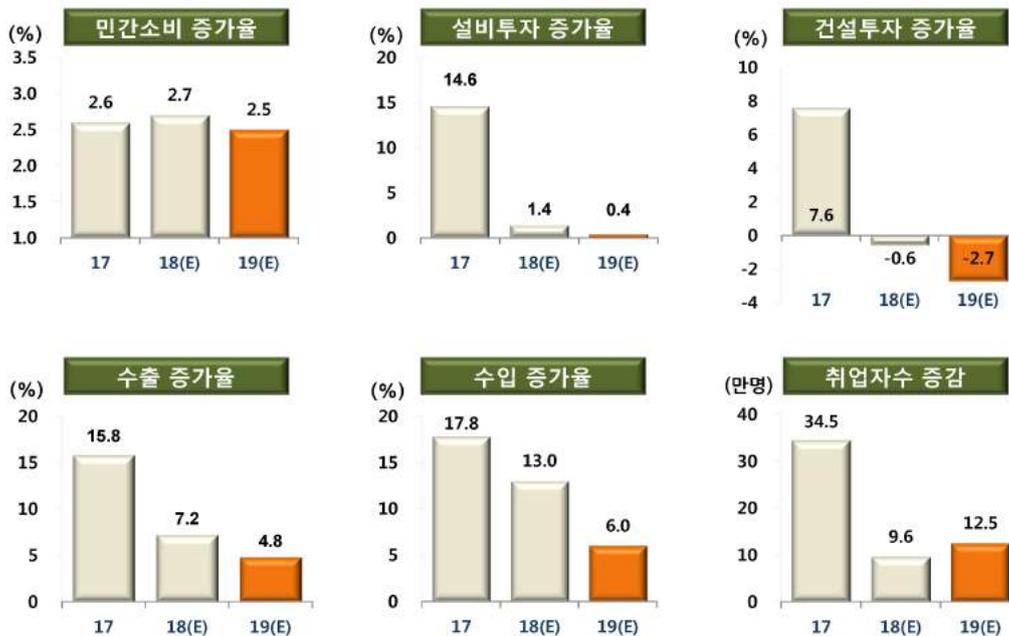


Hyundai Research Institute

4

② 부문별 전망

1. 최근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



Hyundai Research Institute

5

③ 경제성장률 전망

1. 최근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

· '불안한 성장 구조' 시현중

- 2분기 이후 내수 침체 속 순수출(수출-수입) 이 성장을 견인하는 '불안한 성장 구조' 지속
- 경제성장률에 대한 내수 기여도, 2분기 $\Delta 0.7\%p$, 3분기 $\Delta 1.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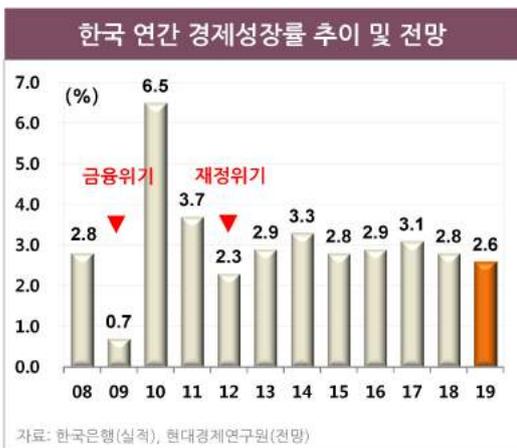


③ 경제성장률 전망

1. 최근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

· 경제성장률 2년 연속 하락(HRI 2018 2.8% → 2019 2.6%)

- 2019년 경제성장률 2.6%로 금융위기('09년 0.7%)와 유럽재정위기('12년 2.3%) 이후 최저
- 2019년 경기 추세는 상저하고 예상, **상반기 2.4% → 하반기 2.7%**



<참고>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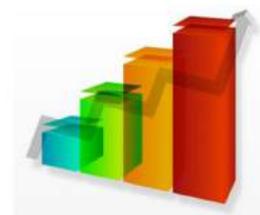
1. 최근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

-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8년보다 하락 전망
 - IMF는 2019년 성장률 2.9% → 2.6%, 2018년 3.0% → 2.8%
 - 한은, 2019년 성장률 2.8% → 2.7%, 2018년 2.9% → 2.7%
 - 민간연구기관 2.5~2.6%

주요 국내의 경제연구 기관의 2018년 및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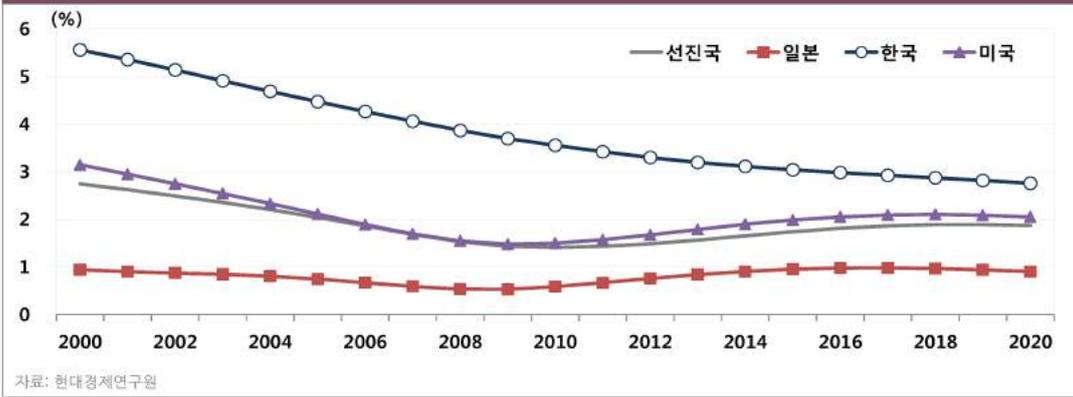
① 구조적 장기 침체 논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선진국 잠재성장률 방향의 괴리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는 모습
- 한국과 선진국 간의 성장률 격차, 2000년 3%p에서 2010년 2%p, 2020년 1%p로 축소

한국 및 주요 선진국 잠재성장률 추이



Hyundai Research Institut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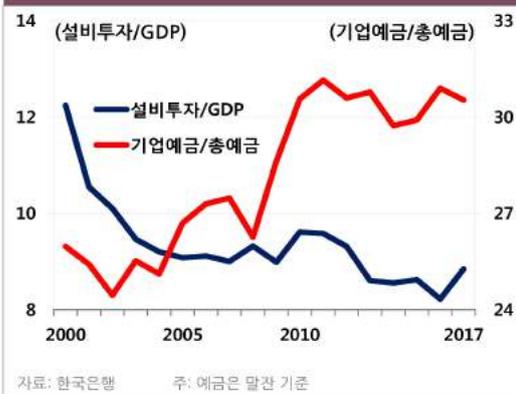
① 구조적 장기 침체 논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물적 생산요소 투입 위축이 성장력 하락의 주된 원인

-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예금 보유는 증가
-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도 급격하게 감소

기업의 투자 및 예금 비율(%)



생산가능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망



Hyundai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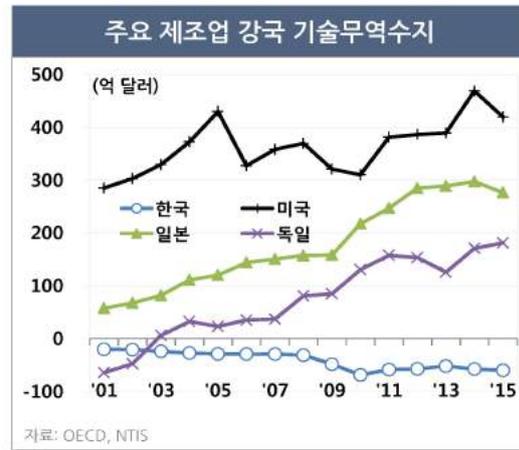
11

① 구조적 장기 침체 논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질적 생산요소 투입의 비효율성 문제 심각

- 총 R&D 투자(정부 + 민간) 규모는 2000년 13.8조원에서 2016년 69.4조원으로 급증
- R&D투자/GDP 비중, 같은 기간 2.2%에서 4.2%로 증가(GDP 대비 R&D 비중 세계 2위)
- 그러나 R&D투자가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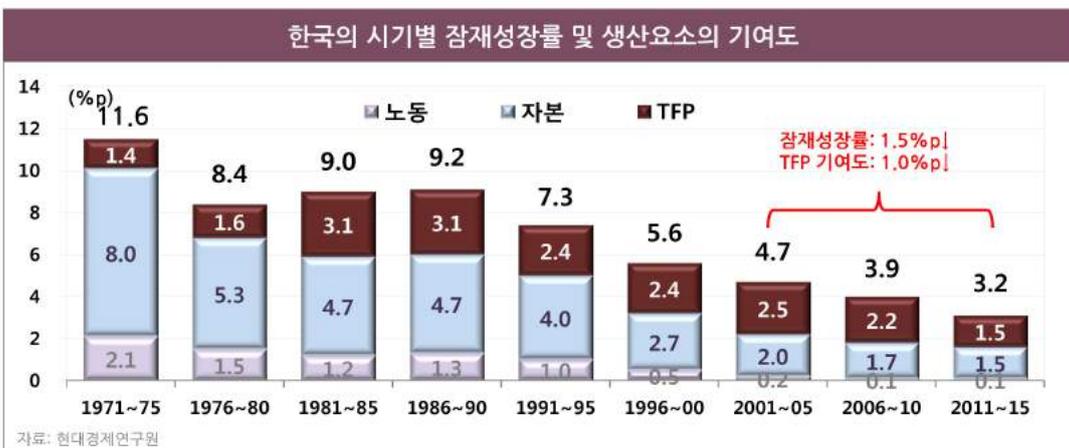


① 구조적 장기 침체 논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準加工貿易형 산업구조 및 薄利多賣형 생산구조

-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은 TFP 기여도 급락
- 01~15년 성장률 4.7%에서 3.2%로 1.5%p 하락
- 이중 3분의 2수준인 1%p가 TFP기여도 하락에 기인



① 구조적 장기 침체 논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제조업 경쟁력, 중국이 한국을 추월

- 중국은 2005년 세계 17위에서 2015년 한국을 제치고 4위, 2016년 미국을 넘어 3위로 부상
-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09~2014년 4위, 2015년 이후 5위로 하락



Hyundai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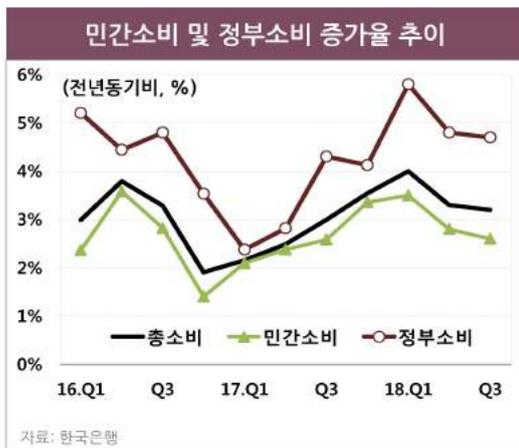
14

② 소비 불균형, 내수 기반 약화로 이어지나?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간 불균형

- 확장적인 정부예산안이 민간소비를 보완하고 있으나,
-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전제되지 않는 정부지출 확대는 가계의 소비기반 확충에 제한적



Hyundai Research Institute

15

② 소비 불균형, 내수 기반 약화로 이어지나?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국내소비와 해외소비 간 불균형

- 국내 가계의 해외지출과 해외직접구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수 기반 약화가 우려
- 2018년 상반기 해외직구는 1,494만건, 13.2억불로 각각 전년동기비 36% 및 37% 급증



② 소비 불균형, 내수 기반 약화로 이어지나?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불균형

-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소비성향 하락폭이 급격하여, 소비 부진 장기화 예상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 동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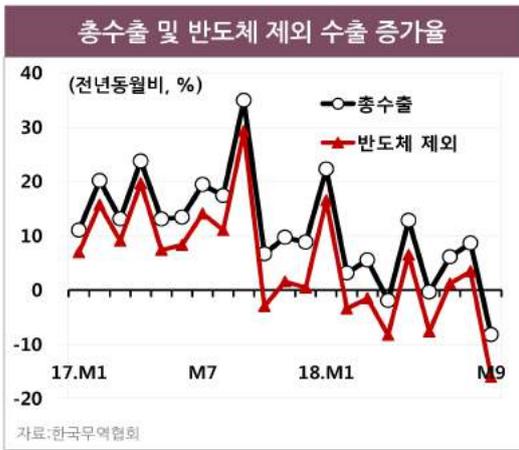


③ 반도체 의존형 경제의 한계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수출 및 설비투자의 높은 반도체 의존도

-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반도체 수출의 호조에 따라 반도체 부문의 설비투자 비중 또한 증가



③ 반도체 의존형 경제의 한계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반도체 시장 하방리스크 확대로 성장 견인 부문의 상실 우려

- 세계 반도체 시장 둔화 전망,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등으로 향후 시장 하방리스크 확대
- 반도체 시장이 위축될 경우, 수출 경기 둔화 및 경제성장률 하락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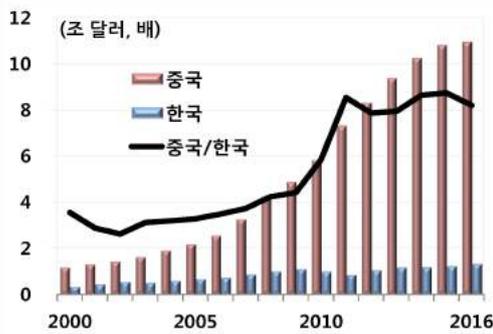
④ 기업은 왜 한국을 탈출하는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해외시장 규모의 경제적 이점

- 중국 내수시장 규모는 2000년 한국의 2배 수준에서 2012년 이후 8배로 급성장
- 대규모 내수시장의 장점: 충분한 시장수요, 규모의 경제로 비용절감, 테스트 베드
- 포춘 세계 500대 기업수 중국은 2000년 12개에서 103개로 급증

한·중 내수시장규모 및 중국/한국 시장 비율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UN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포춘 세계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수



자료: Fortune

④ 기업은 왜 한국을 탈출하는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노동시장의 경직성

- 노사협력은 WEF 경쟁력 130위(140개국중)
- 경직적 고용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정리해고비용 순위 112위)
- 특히 임금이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결정

WEF 한국 노동부문 경쟁력 순위(2018)



자료: WEF 주: 140개국 기준

민간협약임금인상률 및 비교지표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생산성본부

④ 기업은 왜 한국을 탈출하는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기업들의 높은 규제 부담

- WEF의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순위, 2018년 현재 한국 79위



Hyundai Research Institute

22

④ 기업은 왜 한국을 탈출하는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규제개혁 체감 미흡

- 09~16년의 행정부의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건수는 총 8,878건(연평균 1,110건)
- 17대 국회의 총입법건수는 3,773건에 불과하였으나, 19대에는 7,429건으로 급증
- 17대의 의원입법/총입법 비율은 59.3%, 18대 62.6%, 19대 72.0%, 20대 72.1%



Hyundai Research Institute

23

⑤ 건설업 위기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현 정부 임기 내 SOC투자 축소 지속

- 2017~22년 총예산은 400조원에서 500조원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6.7%)하는 반면
- 동 기간중 SOC예산은 22조원에서 16조원으로 급감(연평균 -4.8%)
- 이에 따라 SOC예산/총예산 비중은 2017년 5.5%에서 2022년 3.1%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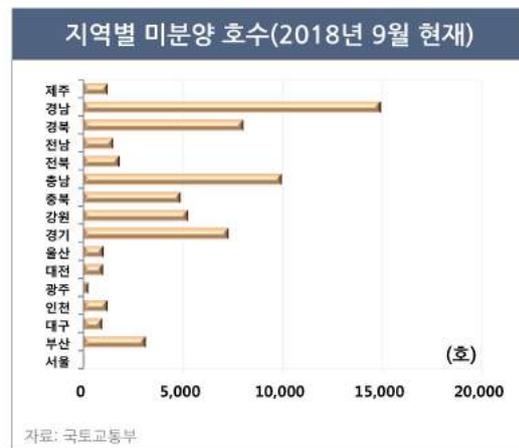


⑤ 건설업 위기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증가

- 지방과 수도권 미분양호수는 2015년 5월 1만 4,000호로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 2018년 8월 현재, 수도권 9,000호, 지방 5만 4,000호
- 지역별로는 경남, 충남, 경북, 경기, 강원 등의 지역에 미분양이 집중



⑤ 건설업 위기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시장에 대한 비우호적 정책 기조



⑤ 건설업 위기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소득불균형은 자산불균형에 기인한다는 시각, 부동산에 대한 비우호적 기조**
 - 자산집중을 막아야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
 - 부동산투자 이익 제한, 다가구 소유자에 대한 과세 등 일련의 부동산 집중 억제 정책 지속
 - 개정헌법에 '토지공개념' 도입 가능성도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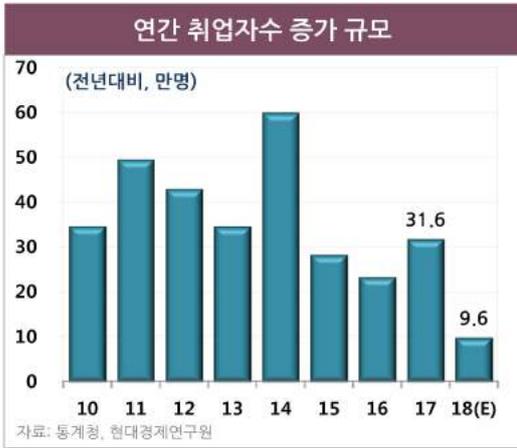


⑥ 고용시장 뉴노멀 시대 도래하는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신규 취업자수 급감

- 2017년 31만 6,000명에서 2018년 9만 6,000명으로 축소 예상
-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도 2017년 0.391p에서 2018년 0.093p로 축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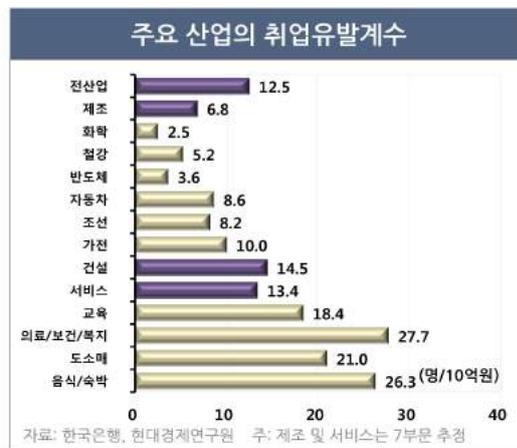


⑥ 고용시장 뉴노멀 시대 도래하는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고용탄성치 급감은 경제성장률 요인보다는 성장구조상의 요인이 크게 작용

- 경제성장률은 수년간 2%대 후반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다만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고용효과가 미약한 산업 위주로 진행



⑥ 고용시장 뉴노멀 시대 도래하는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경기적 요인의 영향으로 한국의 고용창출력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취약

- 미국 및 일본은 경기 호조로 고용창출력이 확대
-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 상승 및 경기부양책이 경기 호조와 고용 확대를 견인
- 일본은 무제한적인 유동성 확대로 내수가 장기불황을 탈출중



⑥ 고용시장 뉴노멀 시대 도래하는가?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건설투자 침체시 10만명~30만명의 유휴노동력 발생 우려

- 2017년 기준 신규취업자 30만명중 건설업 기여분 12만명
- 최근 건설경기 호조로 건설업내 10만명~30만명 수준의 과잉고용 추정
- 2019년 건설경기 침체시 대규모 유휴노동력 발생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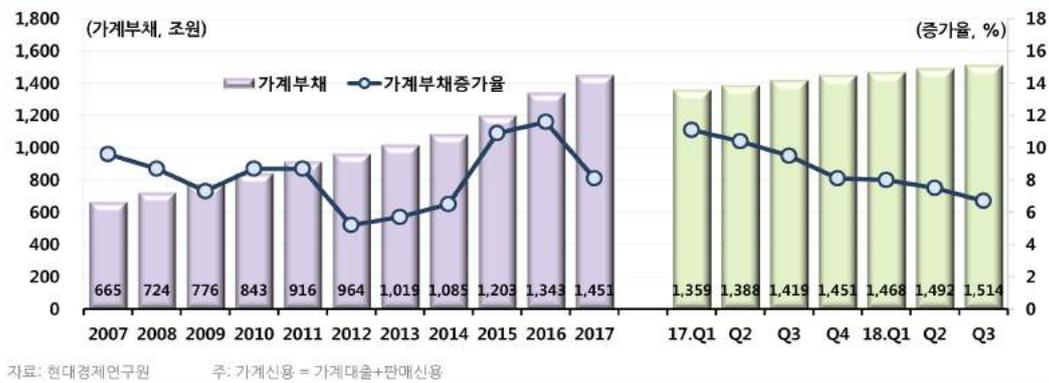


⑦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지연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2018년 3분기말 가계부채 1,514조 원으로 10년전 대비 2배 이상 증가
- 가계부채 규모 증가세 지속, 단 증가율은 하락
- ※ 증가율: 2015년 10.9%,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3분기 6.7%

가계부채 및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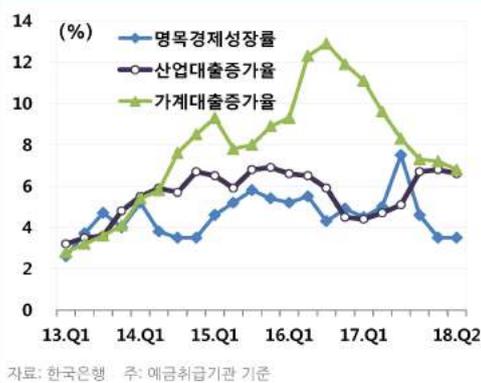


⑦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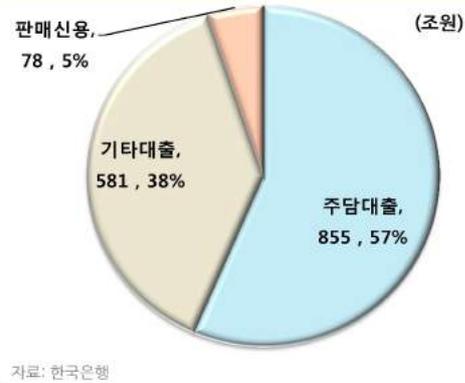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실물경제 펀더멘틀을 넘어서는 가계 부채 규모
- 명목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시중유동성 증가율이 지속
- 부동산 시장 경기 상승세로 주택 관련 대출이 전체 가계신용의 57%를 차지

산업 및 가계 대출증가율



가계신용 부문별 구성(2018년 3분기)



⑦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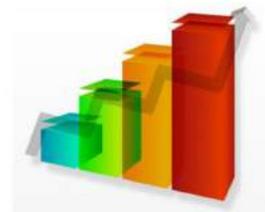
2. 2019년 주요 국내 경제 이슈

•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

- 경제 전체의 가계부채 부담정도인 가계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160% 상회
-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GDP대비 95.2%, 선진국 평균 74.6%, 7번째)



3 시사점



경제 활성화 방안

3. 시사점

•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공황 탈출 시급

첫 째, 내수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둘 째, 소비 회복세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소비 진작 노력과
민간 고용창출력 제고를 통해 가계 실질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

셋 째,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고리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력과 고용창출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 째, 대외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경기 회복세를 이어가야 한다.

다섯째, 민간 주체들의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 정립과 유연한 경제운용 기조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토론 1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2019년 한국경제 4대 리스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2019년 한국경제 4대 리스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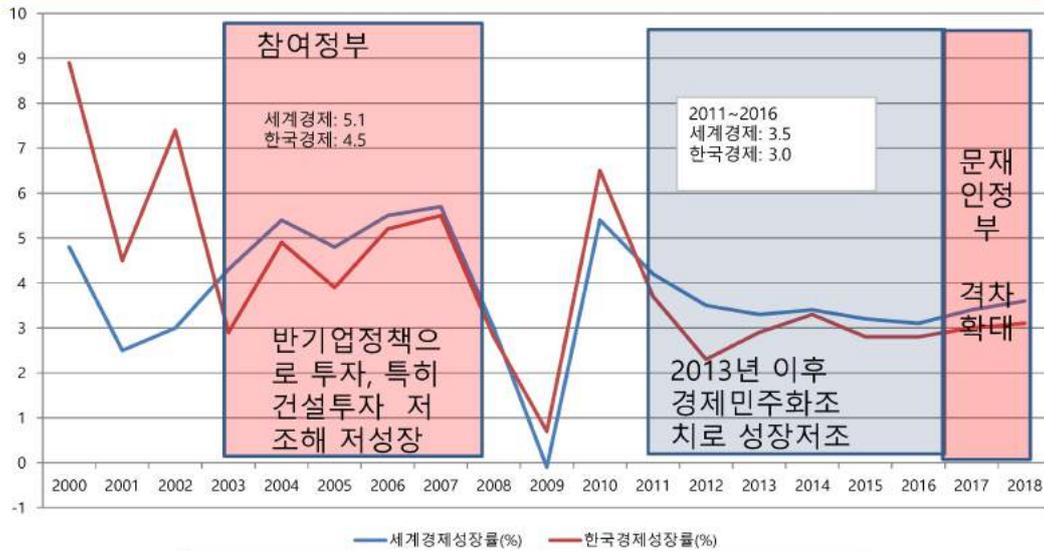
- 성장정책 없는 소득주도성장정책 지속**
 - 최저임금 2년 연속 두자리수(2018:16.4% 2019: 0.9%) 인상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본격 시행(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 미국금리인상 지속과 신흥시장국 금융위기**
- 기업규제 강화 법안**
 -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 주력산업 경쟁력 급락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연**

성장정책 없는 소득주도성장정책 지속

-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참사와 물가상승의 소득 주도 스태그플레이션 심화
- 고용대참사와 분배구조 악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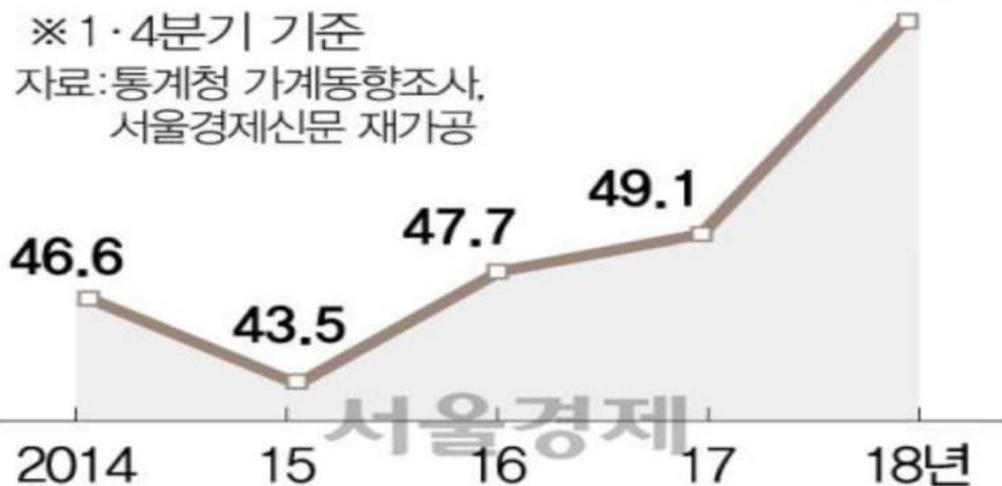
참여정부 이후 세계성장률과 한국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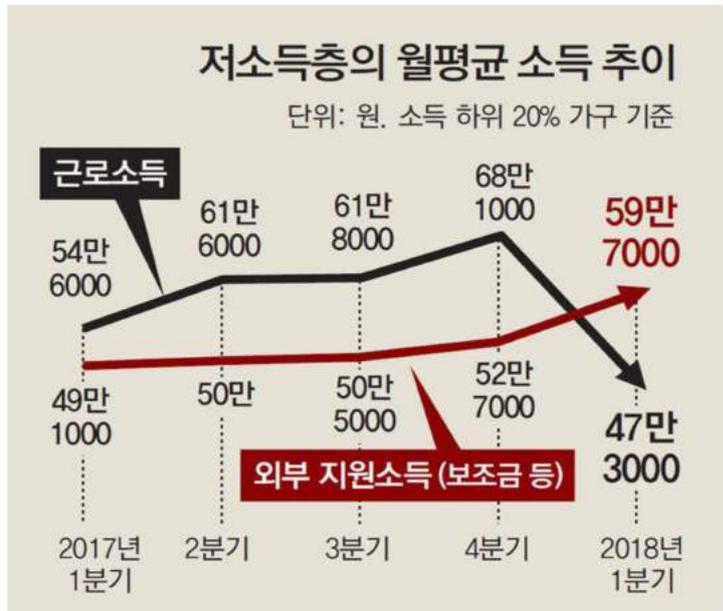
참여정부 실패 답습할 것인가?

충격 더 큰 저소득층

소득 하위 20% 무직자 가구 (2인 이상 가구) 비중 (단위:%)



높아지는 정부지원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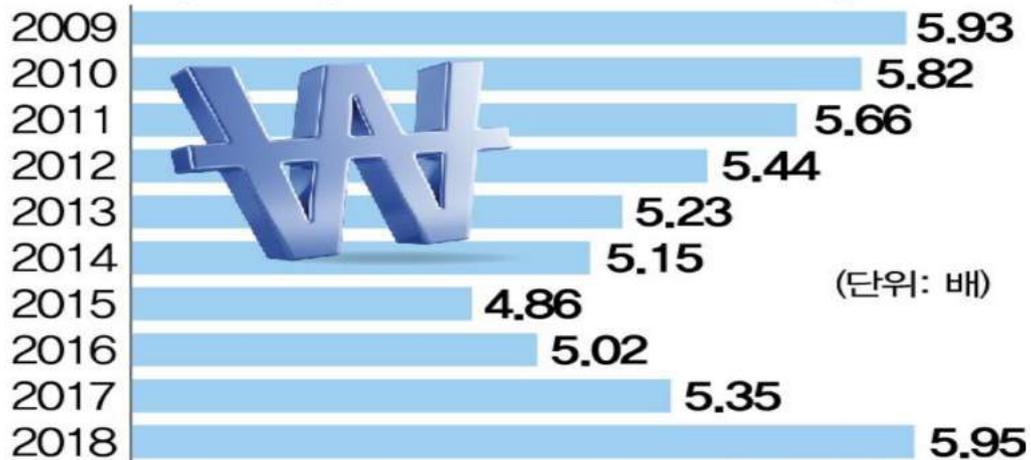


분배구조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

상위20%/하위20% 가구소득배율

1·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전국, 2인이상기준. 숫자가 높을수록 불균등이 커짐



자료 : 통계청

참여정부 분배구조 악화 반복할 것인가



基尼係數는 증가가 소득분배구조 악화 의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미국금리인상 지속과 신흥시장국 금융위기 한국도 안전권 아니다

- 이란: 미국 이란제재
-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
- 아르헨티나: 페소화 급락, 금리인상 기준금리 60%, IMF 300억 달러 구제금융신청
- 브라질: 레알화 가치 폭락
- 베네주엘라: 파산
- 남아공 루피아화 가치 폭락
- 터키: 리라화 폭락, 금리급등, 무디스 금융사 20개 신용등급 강등
- 인도 루피화 가치 폭락
- 파키스탄 루피화 가치 폭락
- 인도네시아 루피화 가치 급락
- 홍콩달러 급락 달러페그 커런시보드제도 위협, 외환시장 개입
-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대두
- 이태리 정정불안에 따른 유로존 위기 가능성 대두
- S&P: 최근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공 베네주엘라를 취약 5개국(fragile 5)으로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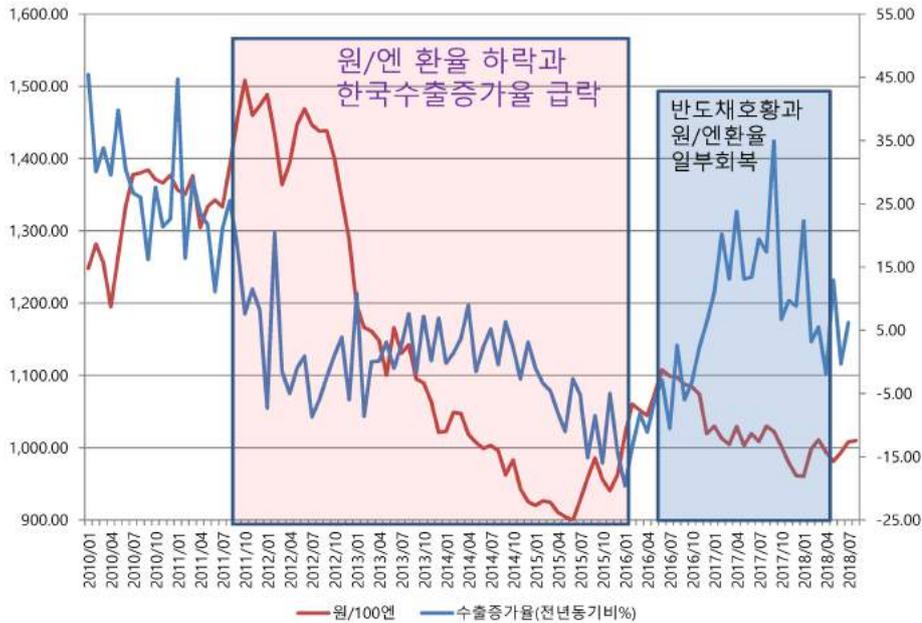
미국연방기금금리와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원/엔 환율과 금융위기



원/엔환율과 한국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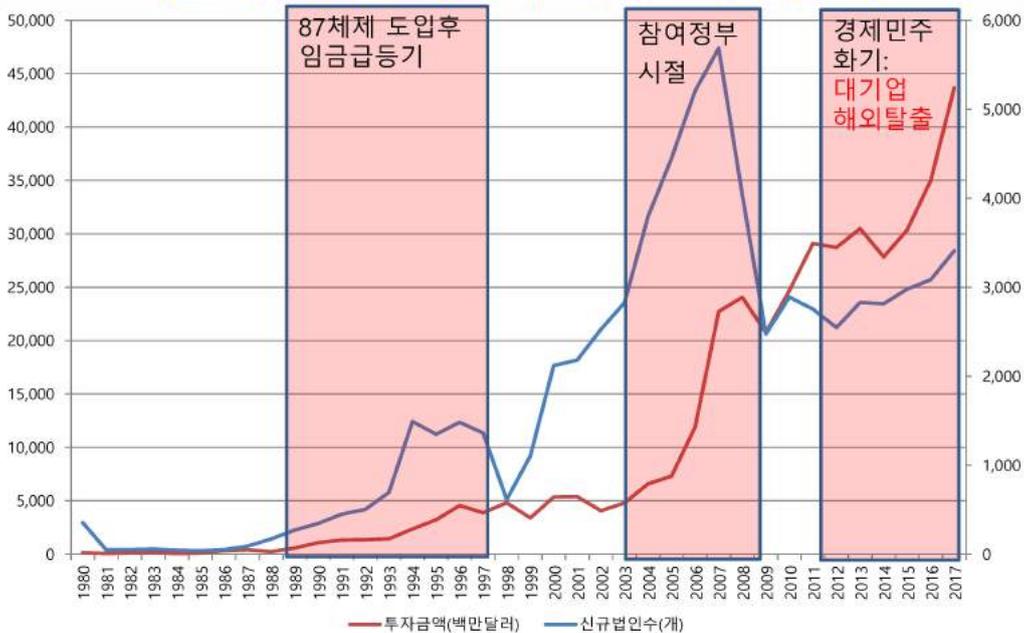
대응방안

- 외국자본 Sudden Reversal 대비 외화유동성 확보
 - 달러확보 통화스왑: **한일 한미 통화스왑 (사실상 어려울 전망)**
- 자본이동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금리정책 신중히
 - 금리인상요인: 한미금리차 확대 따른 환차손 우려로 자본유출
 - 금리인하요인: 가계부채 기업부실, 경기침체
- 환차손+주식투자손실 안되도록 투자환경개선 등 내수활성화
- 위기 발생시 대비 재정건전성 확보
 - 위기 시 국가부채 급증 등 재정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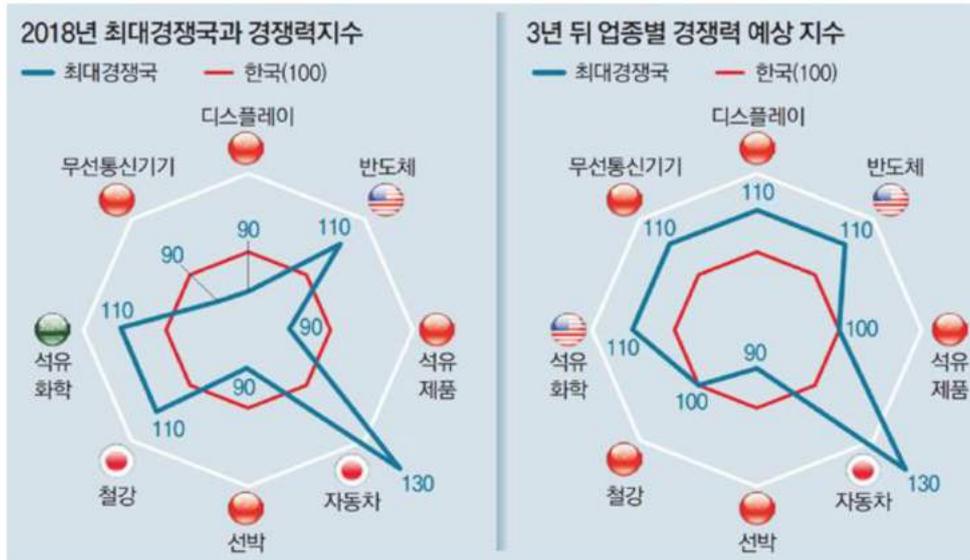
기업규제 강화 법안

- 공정경제전략회의(11월 9일)
 - “반칙과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 “성장할 수록 불평등이 심화됐다”
 - “협력이익공유제 등 13개 공정경제법안 국회 통과 요청”
- 당정, 대중소기업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추진(11월 6일)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국회제출
 - 공정위전속고발권 폐지, 기존순환출자해소, 내부거래규제강화, 지배구조 개혁
- 상법개정안 재시동
 -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분리선출 및 대주주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도입, 소액주주권리 강화, 전자투표의무화, 차등의결권 채택 (벤처기업)

한국기업 탈한국 러시 우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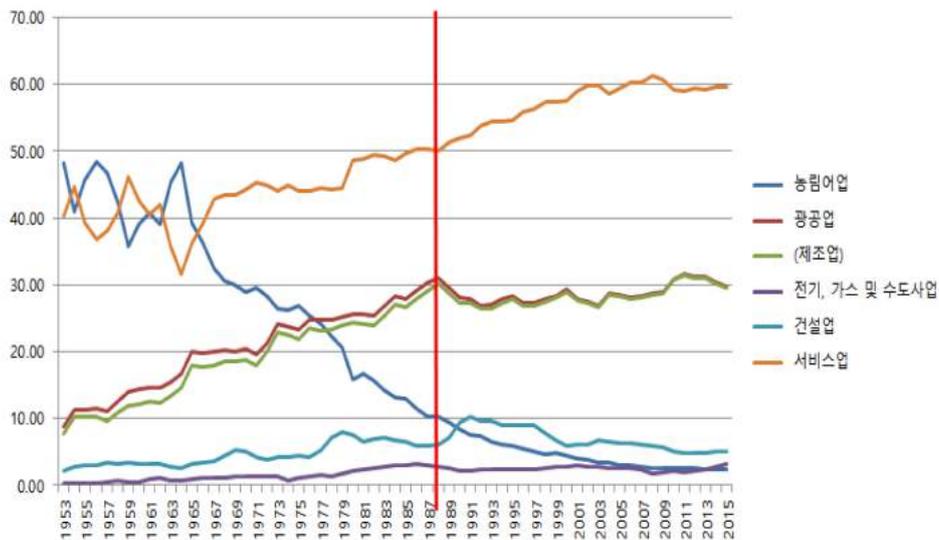
주력산업 경쟁력 급락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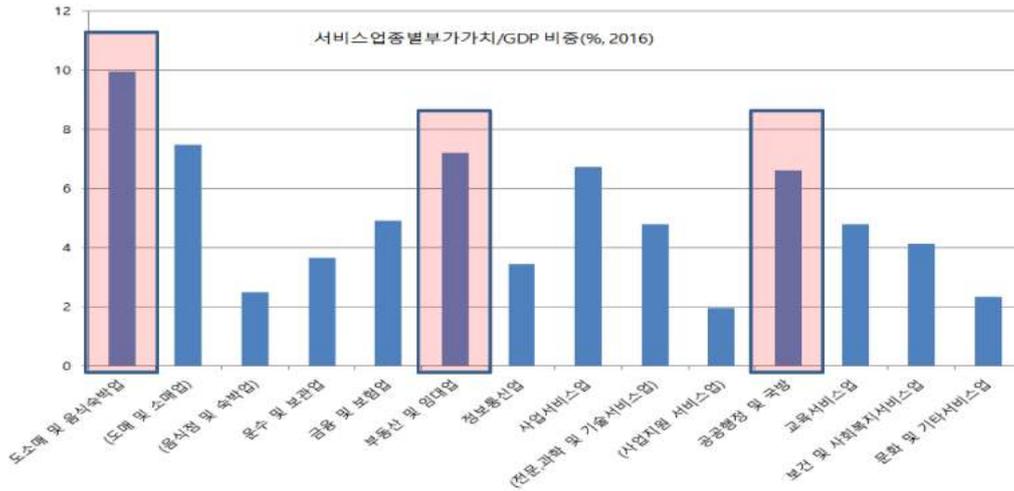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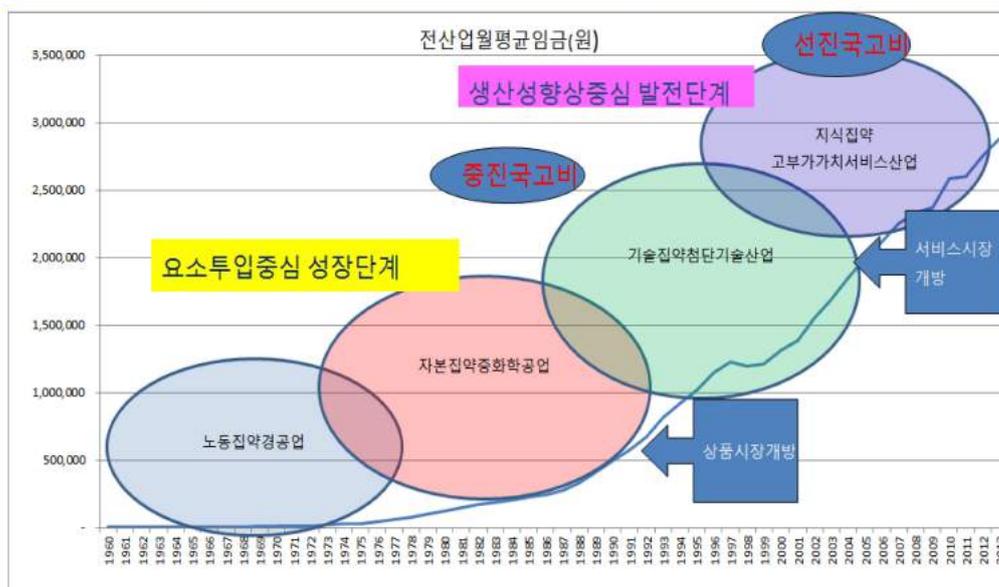
87년 체제 이후 제조업 비중 하락



서비스업은 저생산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 한국 서비스업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임금은 상승하는데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는 지연 임금과 국제산업구조변동



성장전략 1: 투자한국건설

- 획기적인 **규제혁파** (네그티브규제 전면 시행), **감세**(법인세 선진국 수준 15%), **노동시장유연화**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 “**투자한국**” 건설, (세계경제포럼 기준 세계 26위→5년 내 10위내 진입) 내외국 기업 투자 활성화, **대기업 30개 더 육성. 30만 개 일자리 창출**
 - 연간 설비투자 2% 증가, 성장률 1% 제고, 일자리 6만개 창출

성장전략 2: 고부가가치서비스업 육성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으로 70만 개 일자리 창출(<=**규제혁파**)
 - 현재 금융 교육 의료 컨설팅 법률 관광 국제회의전시(MICE)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취업자 700만 명, 연간 2% 포인트 씩 5년 내 10% 제고 **양질 일자리 70만 명 창출**
 - 연간 1% 성장률 제고

성장전략 3: 창업생태계 테크 코리아 (Tech Korea) 건설

- 창업생태계 테크 코리아 (Tech Korea) 건설로 50만 개 창출(<=규제혁파)
 - 영국 Tech UK, 2011년 시작, 150만개 일자리 창출 (24시간내 온라인으로 창업 허가)
 - 전국에 테크 코리아 클러스터 20개 건설 (대기업주도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민간주도 규제프리 창업생태계로 전환) 연간 2만 개 창업, 5년 간 10만 개 창업, 50만 개 일자리 창출
 - 블록체인특구 건설
 - 연간 1% 성장률 제고

성장전략4: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한국 건설

- 50년 먹거리 4차 산업혁명 앞당겨 스마트 한국 건설 (<=규제혁파)
 - 10,000개의 글로벌 벤처기업을 육성, 「글로벌벤처플랫폼」 구축
 - 「제조업혁신 4.0」으로 확대, 5년 내 1만 개 스마트공장 구축
 - 핀테크(FinTech) 중심으로 금융 결제기능을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금융인프라구축
 - 연간 1% 성장률 제고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토론 2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고용·노동 분야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최근의 고용상황 진단

○ 취업자수 증가의 급격한 둔화 및 고용률 하락

- 2018년 10월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는 10만명에 미치지 못함. 이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고용률도 하락

〈표 1〉 취업자와 고용률

	'17.10월	'18. 6월	7월	8월	9월	10월
취업자(천명)	27,026	27,126	27,083	26,907	27,055	27,090
(전년동월대비 증감, 천명)	(281)	(106)	(5)	(3)	(45)	(64)
15~64세 고용률(%)	67.0	67.0	67.0	66.5	66.8	66.8
(전년동월대비 증감, %p)	(0.5)	(-0.1)	(-0.2)	(-0.3)	(-0.1)	(-0.2)
15세이상 고용률(%)	61.4	61.4	61.3	60.9	61.2	61.2
(전년동월대비 증감, %p)	(0.2)	(-0.1)	(-0.3)	(-0.3)	(-0.2)	(-0.2)
15세이상 계절조정 고용률(%)	60.8	60.7	60.5	60.4	60.6	60.6

자료: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 실업률 상승

- 2018년 10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수가 증가하고, 전년동월대비 실업률도 상승

〈표 2〉 실업자와 실업률

	'17.10월	'18. 6월	7월	8월	9월	10월
실업자(천명)	894	1,034	1,039	1,133	1,024	973
(전년동월대비 증감, 천명)	(-27)	(-26)	(81)	(134)	(92)	(79)
실업률(%)	3.2	3.7	3.7	4.0	3.6	3.5
(전년동월대비 증감, %p)	(-0.1)	(-0.1)	(0.3)	(0.4)	(0.3)	(0.3)
계절조정 실업률(%)	3.6	3.7	3.8	4.2	4.0	3.9

자료: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 고용보조지표도 악화되고 있음. 2018년 10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음.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2.5%로 0.9%p 상승하였음.

〈표 3〉 고용보조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단위: %, 천명)

		고용 보조지표1		고용 보조지표2		고용 보조지표3 (확장실업률)**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경제 활동인구	
전 체	'17. 10월	5.1	536	8.5	1,630	10.4
	'18. 10월	5.7	620	9.0	1,720	11.1
청년층 (15~29세)	'17. 10월	10.2	69	20.2	616	21.6
	'18. 10월	10.7	96	20.5	650	22.5

*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는 '노동저활용지표'로 직역됨

**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

자료: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 최근의 고용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제조업 부진 등을 들고 있음. 정부의 진단이 근거가 없지는 않으나, 최근의 급격한 고용상황의 악화를 설명하지는 못함.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고용상황 악화의 큰 영향이 될 수 없음.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단기간에 큰 고용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더구나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수 변동이 늘 연동되어 왔던 것도 아님. 예를 들어, 지난 2014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전년대비 49.1만명 증가했는데, 취업자수가 59.8만명 증가. 반대로 2009년에는 금융위기 여파 속에 생산가능인구가 52.6만명 증가했음에도 취업자수는 8.7만명 감소.

○ 제조업 부진

- 제조업, 특히 조선·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의 부진은 심각한 문제.
- 그러나 고용상황 악화가 제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고용 감소도 매우 큼. 이 산업들에서 최근 각각 10만명에 가까운 취업자수 감소가 나타남.

□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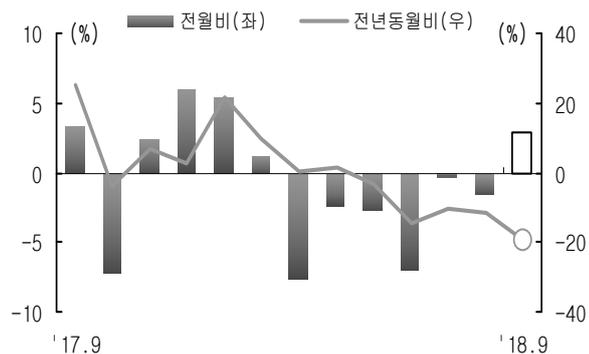
- 민간투자 부진과 제도적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위축에 기인 및 내부자 기득권 보호 위주의 노사관계 정책에 기인

○ 민간투자의 부진

-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9.3% 감소. 하반기 이후 지속적 감소세
- 기업의 비관적 경기전망을 반영

〈표 4〉 설비투자

		설비투자 (%)	
		전월비	전년동월비
'17.	9	3.3	25.0
'18.	6	-7.1	-14.7
	7	-0.3	-10.1
	8 ^p	-1.6	-11.3
	9 ^p	2.9	-19.3



자료: 통계청, 2018년 10월 산업활동동향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주: 2019년 최저임금(시간급)은 8,350원 (2018년 대비 인상률은 10.9%), 인상액 820원

○ 근로시간 단축

-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018.7.1, 30-299인: 2020.7.1, 5-49인: 2021.7.1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월-2022.12월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 인정)

-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연소근로자(15~18세) 근로시간 단축(1주: 법정 40시간 → 35시간, 연장근로한도 6시간 → 5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 근로기준법 51조 개정 문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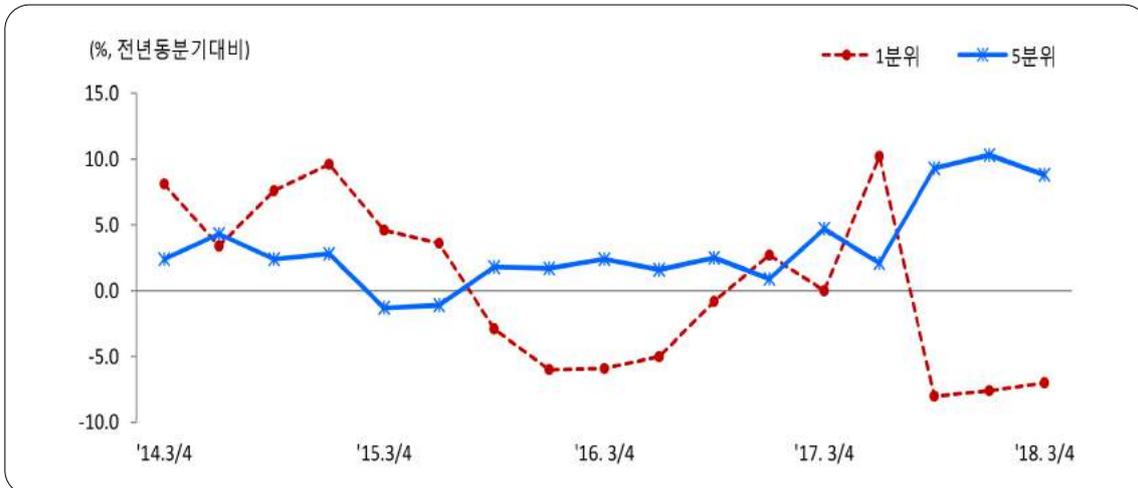
- 최근 임금과 근로시간 경직성이 지나치게 강화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현행 3개월 대폭 확대 필요.

○ 노동시장 내부자 위주의 노사관계 정책

- 노사관계 정책이 지나치게 노동시장 내부자의 이익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노동시장에 활력 저해와 노동수요 위축으로 고용 감소 및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
- 결과적으로 일부의 내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의 고용의 질 저하를 야기할 것임.

[그림 2]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표 5>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4,747.9	4.6	1,317.6	-7.0	2,842.8	-0.5	4,147.5	2.1	5,691.1	5.8	9,735.7	8.8

자료: 통계청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 결론

- 정부의 고용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정책방향과 수단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
 - 2018년 취업자수 증가 10만 명대로 예상
 - 정부가 일자리 본예산, 두 차례 추경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관련 예산에만 54조원을 투입했지만, 고용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
- 고용 및 노동정책의 과도한 정치화는 우려할만한 상황
 - 정부는 노동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자제. 노사자치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토론 3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무술년, 한 해 세계와 한국 경제 결산 및 내년 전망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매년 이맘때면 으레 것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도 마무리돼 감
 - o 한 마디로 모든 분야에 걸쳐 '큰 변화(big change)'가 일어난 해임
 - o 미국의 보호주의로 각국 간 틈이 벌어진 상황에서 최고통수권자 간 갈등까지 겹쳤음
 - o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최고통수권자와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등 통화정책 수장도 교체됐음
- 경제 분야에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2009년 2분기부터 지속돼온 세계경기 회복세가 꺾이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음
 - o 미중 간 통상마찰이 2년 가깝게 지속되면서 세계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임
 - o GVC란 '기업 간 무역(Inter Firm Trade)'와 '기업 내 무역(Intra Firm Trade)'로 대변되는 국제 분업 체계를 말함
- GVC 약화 현상은 세계 경제 앞날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o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증가율과 GVC 간 상관 계수를 추정해 보면 0.85에 이를 만큼 높게 나옴
 - o 특히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탄성치(세계교역증가율÷세계경제성장률)에서 GVC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지속돼 왔던 세계경기 장기호황 국면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관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임

-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 3대 예측기관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음
- 글로벌 증시가 추세적으로 하락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음

〈표 1〉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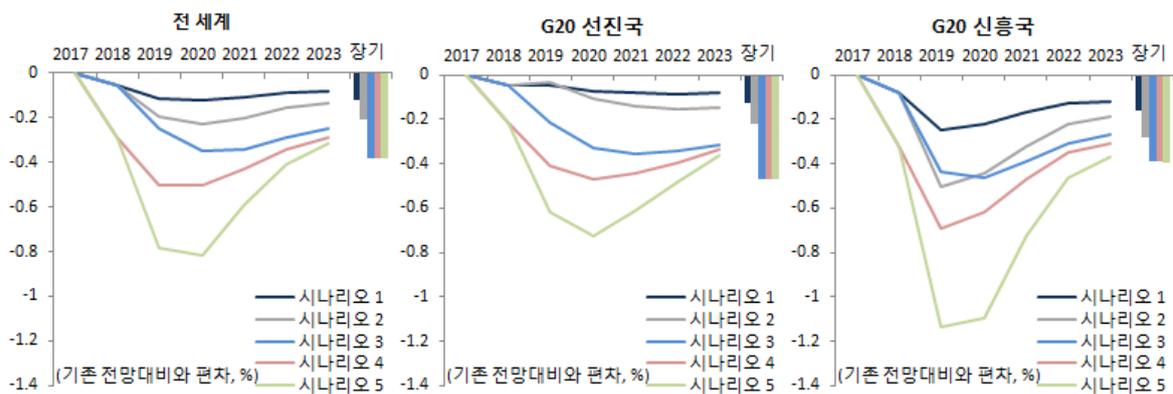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정 전망		기존 전망과 차이	
							2018(f)	2019(f)	2018(f)	2019(f)
세계	3.5	3.5	3.6	3.5	3.3	3.7	3.7	3.7	-0.2	-0.2
선진국	1.2	1.4	2.1	2.3	1.7	2.3	2.4	2.1	0.0	-0.1
신흥국	5.3	5.1	4.7	4.3	4.4	4.7	4.7	4.7	-0.2	-0.4
한국	2.3	2.9	3.3	2.8	2.9	3.1	2.8	2.6	-0.2	-0.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미중 마찰의 주범인 당사국도 문제다. 2차 대전 이후 최장의 성장국면이 기대됐던 미국 경제는 다음 회복국면으로 미루거나 영원히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지난 2분기 4.2%를 정점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음
 -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길어지면서 미국 경제도 부메랑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중국 경제가 문제임
 - 올 들어 상해지수가 30% 가깝게 급락했고 지난 2월초 달러당 6.2위안선까지 올라갔던 위안화 가치가 연말을 앞두고 6.9위안대까지 떨어졌음
 - 지난 상반기에 성장률 목표(6.5~7%)를 지켰던 경기도 4분기에는 6.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만큼 심상치 않아 중진국 함정과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음
- 내년을 앞두고 미중 간 무역마찰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 가운데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세계경제질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 전자는 내년에도 계속될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압력에 궁극적으로는 시

- 진핑이 굴복할 것이라는 ‘중국판 삼전도 굴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한번 승기를 잡으면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감안하면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과 무역협상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후자는 현 상황에서 크게 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임
 - 세계 경제 주도권 싸움은 그 자체가 ‘타결’ 혹은 ‘합의’와는 거리가 먼 이분법 (dichotomy) 문제임
 - 양국 간 경제발전단계 차이가 워낙 커 어떤 방식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근거에서임

〈그림 1〉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시나리오별 세계 경제 성장경로 전망



- 주 1 : 시나리오 1 = 기존 성장 경로 전망(Tariffs in Baseline)
- 주 2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 + 중국의 2,670억 달러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
- 주 2 : 관세 부과 추가 고려(Add China Retaliation)
- 주 3 : 시나리오 3 = 시나리오 2 + 자동차, 트럭, 부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추가 고려
- 주 3 : (Add Cars, Trucks, and Parts with Retaliation)
- 주 4 : 시나리오 4 = 시나리오 3 + 심리적 요소 추가 고려(Add Confidence Effect)
- 주 5 : 시나리오 5 = 시나리오 4 + 시장 반응(Add Market Reaction)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양 극단론 속에 절충점은 없는가 여부임
 - 미국 내에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피로로 중간 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을 민주당에게 넘겨주는 등 실질적으로 패배했음
 -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무역 갈등 부담이 커지면서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시진핑 모두 절충점 마련은 절실함

- 유럽도 ‘통합’보다 ‘균열’이 더 심해진 한 해임
 - o 한동안 잠잠했던 이탈리아가 예산안을 놓고 유럽연합(EU)과의 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데자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o 길게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통합의 앞날에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을까 우려(‘유로 위기 1.0’에 이어 ‘유로 위기 2.0’)가 확산되는 것도 이 때문임
- 유럽연합(EU)와 유로 랜드는 초기에 각국 7개국, 11개국으로 출발해 그동안 ‘확대(enlargement)’ 단계를 거쳐 현재 28개국(영국 탈퇴 때 27개국), 19개국 체제로 확립했음
 - o 하지만 2년 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극우 세력, 지난 3월에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에서 오성운동과 동맹당이 약진하면서 균열 조짐이 지속되고 있음
 - o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유럽통합 앞날과 EU, 유로 랜드 존속 여부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탈리아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결함이 다시 노출됨에 따라 유럽 통합 앞날은 ① 현 체제 유지(muddling through) ② 유럽통합 및 유로화 강화(bonds of solidarity) ③ 유럽통합과 유로화 동시 붕괴(bonds of solidarity) ④ 유럽통합 질서회복(the collapse) 등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음
 - o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최근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유로 위기 2.0’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원국 간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유럽통합의 근본 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음

〈표 2〉 이탈리아 사태 이후 예상 유럽통합 시나리오

구 분	현 체제 유지	유럽통합 강화	유럽통합 붕괴	질서회복
구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B의 국제 매입 확대 • 유럽안정기금(EFSF) 확대 • 국가부도 처리 장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통화기금(EMF) 설립 • 유로본드(E- bond) 도입 • 재정동맹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금융 수혜국의 유럽통합 탈퇴 • 구제금융 지원국의 유럽통합 탈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개선 • 경쟁력 회복
가능성	가장 높음	상당함	낮음	거의 없음

자료 : Ahearn et al., Economist Intelligence Uni(2011년)을 현 시점에서 재평가

-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도 올해를 정리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임
 - o 1980년대 후반 선진국 주식시장(블랙 먼데이), 1990년대 후반 신흥국 통화시장(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후반 선진국 주택시장(서브 파라임 모기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2010년대 후반에는 금융위기 후보지로 신흥국 상품시장이 지목돼 왔음
 - o 지난 3월 이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 이어 이란, 터키 등 중동 국가가 잇달아 외자 이탈에 시달리면서 재현되고 있는 금융위기 조짐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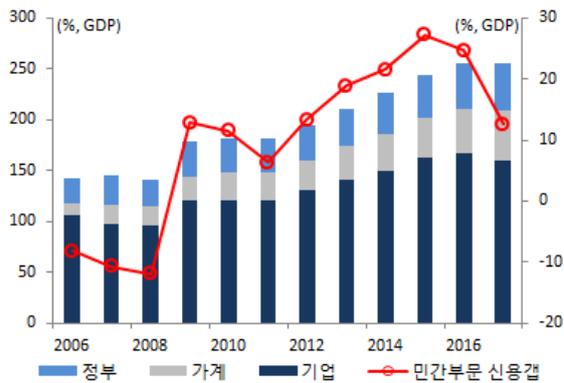
- 내년을 앞두고 아르헨티나에 이어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오히려 악화되는 분위기로 모두 상품가격에 민감한 신흥국 임
 - o 지난 10년 동안 늘어난 달러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에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임
 - o 금리차와 환차익을 겨냥해 이동되는 캐리자금도 네거티브 트레이드 여건이 형성돼 달러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자 이탈이 가세되고 있음

- 신흥국의 미숙한 정책대응도 문제임
 - o 외자 이탈을 수반한 달러 부채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책은 외환보유 확충과 외자 조달 능력을 키우는 일임
 - o 지난 3월 이후 금융위기 조짐에 시달리는 대부분 신흥국은 금리인상으로 대처해 오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책(기준)금리를 60%까지 올렸음

-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금리인상은 실물경기 침체와 추가 외자이탈 간 '악순환 고리(vicious cycle)'를 형성시킴
 - o 20년 전 태국,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배경임
 - o 벌써 일부 신흥국은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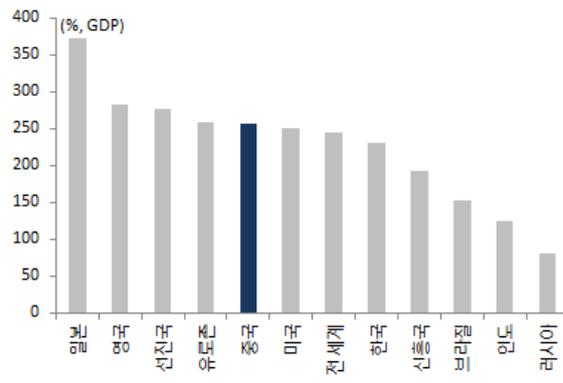
-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이상 달러 부채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추정했음
 - o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올린 Fed가 올해 마지막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린 후 내년에도 세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됨
 - o 신흥국 외화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임
- 중요한 것은 신흥국에서 과연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점임
 - o 글로벌 투자은행(IB)이 활용하는 외환상환계수 등으로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을 점검해보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터키, 파키스탄, 이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높게 나옴
 - o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은 그 다음 위험국임

〈그림 2〉 중국 국가부채 분해



자료 : BIS

〈그림 3〉 국가별 국가부채 비교



자료 : BIS

- 금융위기 발생 고위험국으로 분류되는 중남미 국가는 외채위기로 학습효과가 있는데다 미국과의 관계(베네수엘라 제외)도 괜찮음
 - o 하지만 이란처럼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거나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파키스탄 등과 같은 국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더라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임
 - o 내년을 앞두고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차기 금융위기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할 것인가'는 이런 각도에서 따져보면 어느 정도 감(感)을 잡을 수 있음
 - o UN의 수출통제품목인 북한의 석탄 수입이 공식화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흐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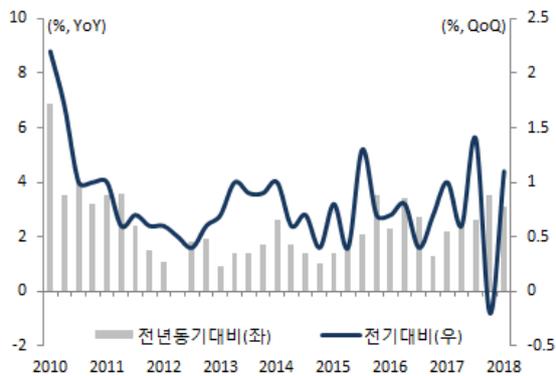
러지고 있는 한국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꼼꼼이 따져봐야 할 때임

- 우리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는 나라밖에서 먼저 제기했음
 - o 금융위기 이후 경기진단과 예측지표로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받는 국제협력기구(OECD)의 복합선행지수(CLI)로 한국의 경우 작년 11월 이후 '100' 밑으로 떨어진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o 이 지수가 '100'을 밑돌 때는 '경기 둔화' 혹은 '침체'를 의미함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에 놓인 변수는 녹록치 않음
 - o 대외적으로 각국의 보호주의 물결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은 한국에 집중되고 있음
 - o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 성장세도 한 풀 꺾인데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터키,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은 금융위기 재연 조짐도 감지됨
- 대내적으로는 현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과 기업정책 개혁은 가는 방향이 맞는다하더라도 정책 수용층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유예기간을 뒤야 함
 - o 과도한 의욕과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다보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음
 - o 가계부채 부담도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된 가운데 거시(성장률과 고용)와 미시(상장기업 실적) 차원에서 삼성전자 쏠림과 착시 현상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음
 - o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테일 리스크(tail risk·꼬리 위험)'도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음
- 더 우려되는 것은 경기가 둔화(혹은 침체)될 경우 이를 살릴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느냐 하는 점임
 - o 통화정책은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추진하기가 어려움
 - o 재정정책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나 재정수지가 너무 빨리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정책은 외화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돼 실질적으로 '개입'이 어려워졌음

- 우리 경제는 유독 위기설에 민감함
 - o 정책당국자가 알아둬야 할 것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위기설이 곧바로 판치는 것은 「통계 수치상의 위기」가 아니라 정부의 경제운용 체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시스템상의 위기」에 연유된다는 점임
 - o 정책 책임자는 경기논쟁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경제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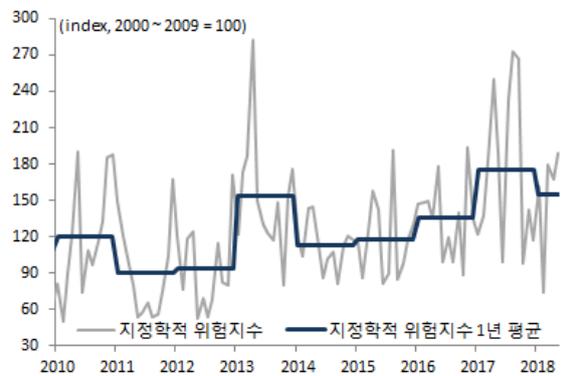
- 종전의 이론과 관행이 통하지 않는 경제정책 여건에서는 특정인에 의존하기보다 국민 모두의 집단 지성을 구해 대처해 나가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 더 효과적임
 - o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주연이 되는 ‘M-트로이카(Management-troica)’ 체제를 구축해야 함
 - o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지표경기보다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뒤야 함

〈그림 4〉 한국 경제성장률



자료 : 블룸버그

〈그림 5〉 한국 지정학적 위험지수



자료 : Geopolitical Risk Index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토론 4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 연구위원

2019년 대내외 경제전망과 한국경제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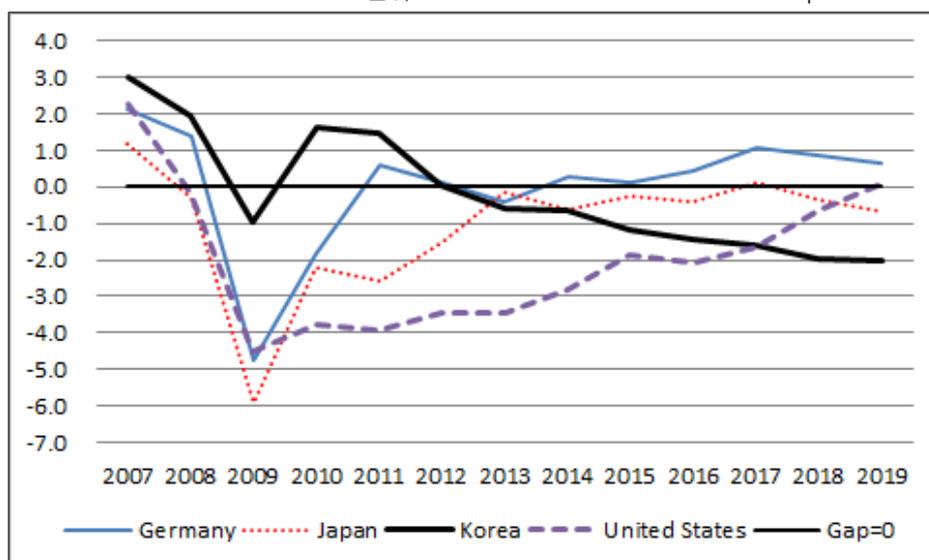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 연구위원

1. 대외여건: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패권경쟁과 이로 인한 신흥국 경기 불안 못지 않게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에 있어 중요한 리스크 요인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여부다. 현재 선진국들의 경기 확장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생산능력 확대가 점차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OECD의 생산갭 자료를 살펴보면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높은 (+) 생산갭을 보이거나 빠르게 (-)갭을 축소해 가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내외로 상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는 지속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독일을 중심으로 내년 중에는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거두어지면 2009년 이후 지속되어온 세계경제의 확장국면은 다소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신흥국 불안도 더 확대될 수 있다.

〈 그림 1〉 주요국 생산 갭 추이

단위: deviations of actual GDP from potential GDP a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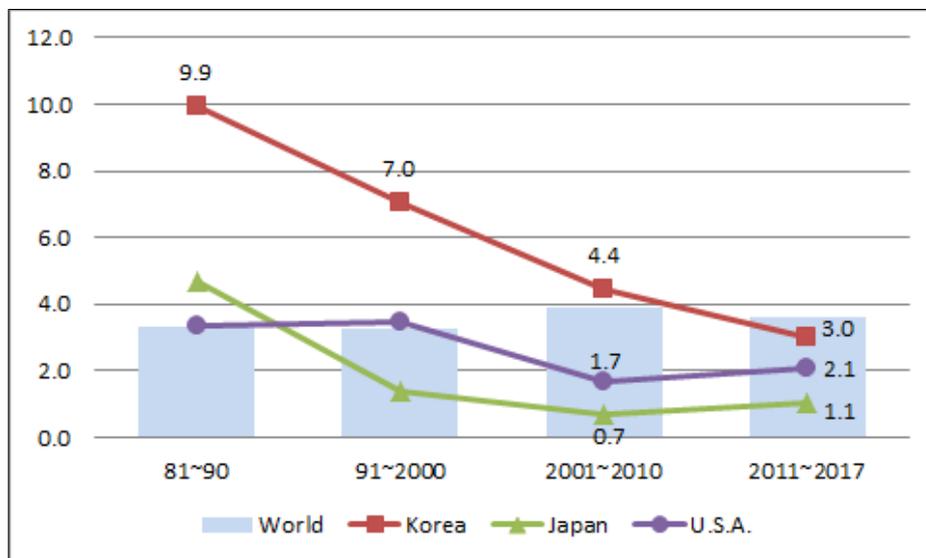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104 -Nov. 2018

2. 대내여건: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대응

한국경제는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 산업구조조정 실패, 성장잠재력 둔화 등으로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미국, 일본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우리 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이미 저성장에 진입했으며 구조적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사실 과거 정부들이 시도한 지식경제, 녹색경제, 창조경제 등은 저성장 국면을 인식하고 이를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비록 성과가 크지 않았으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방향성에는 일관성이 있었다. 물론 이 정부에서도 혁신성장을 외친다. 하지만 말뿐이고 내용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다. 얼마 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지원 방안’이라는 대책에는 차량공유, 원격의료 등 핵심 규제에 대한 방안은 발표되지도 않았다. 규제완화 없는 혁신성장 구호는 공허하다. 현 정부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과거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에서 이탈한 셈이다.

< 그림 2 > 주요국 성장률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로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일자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숙련 편향 기술진보이기 때문이다. 추상적 사고력, 창조적 능력, 문제 해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미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또는 단순 반복적인 직무는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

다.1) 기술진보가 몰고올 불평등,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표 1〉 자동화를 통한 일자리 대체 확률(%)

직종(대분류)	컴퓨터에 의한 일자리 대체 확률
1. 관리자	0.309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366
4. 서비스 종사자	0.518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631
9. 단순노무 종사자	0.716
3. 사무종사자	0.731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749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806
5. 판매 종사자	0.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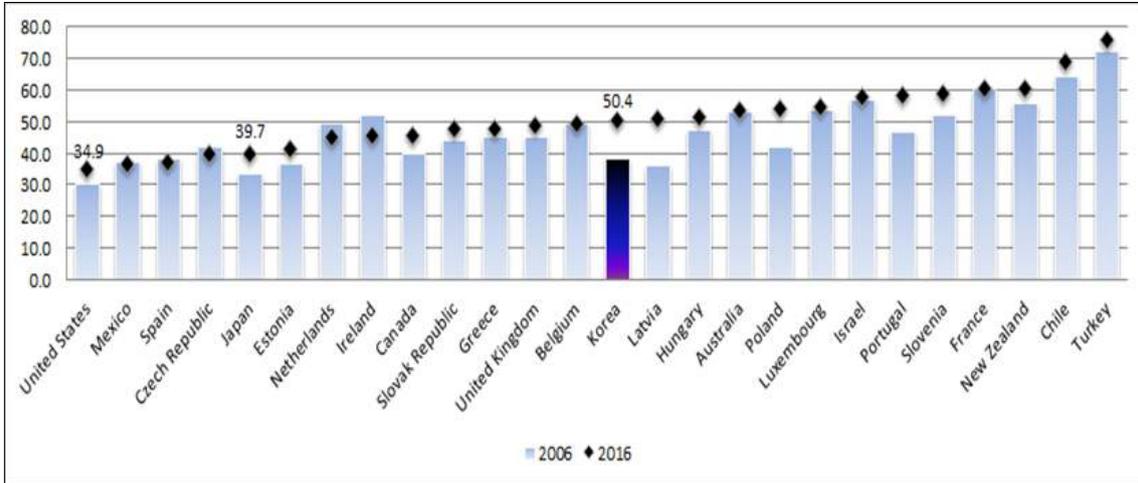
출처: 김세움(2015)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정책연구 2015-05, 한국노동연구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은 오히려 일자리 확충과는 역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이 그렇다. 취지는 인정한다 해도 지나친 과격성으로 인해 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6년에 이미 중위임금의 50%를 넘었으며 OECD국 상위 수준이다. 실질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 미국을 앞질렀다.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을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고용참사, 분배쇼크가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전통시장 환경 미화원 등 급조된 초단기 일자리 5만9000개로 대응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듯하다

1) 'AI의 미래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백악관, 201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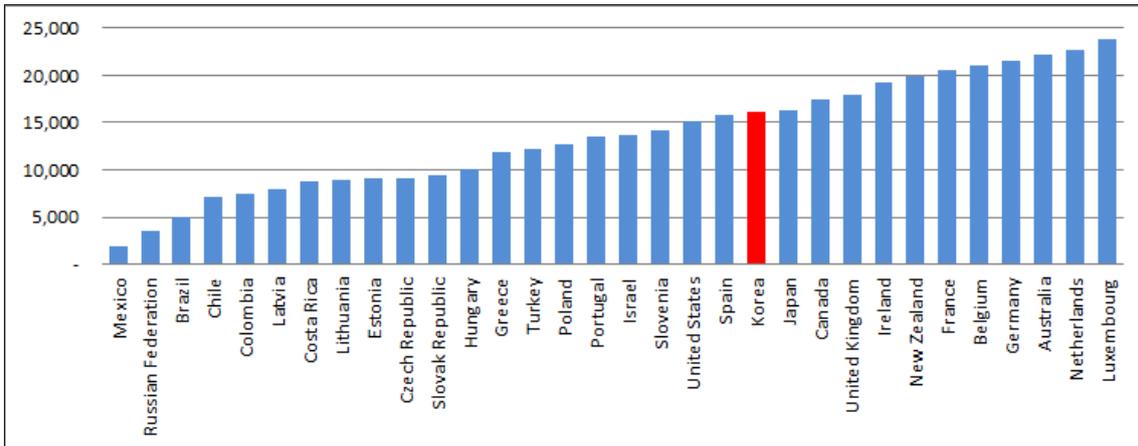
〈 그림 3 〉 OECD국가들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단위: %



〈 그림 4 〉 주요국 실질최저임금 수준

단위: In 2017 constant prices at 2017 USD PPPs



3. 정책과제 : 정책 방향 전환 시급

△수출 동력 약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금리 변동, △투자 위축, △소비 둔화 등으로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며 2019년 퍼펙트 스톱(복합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전망들의 비교적 공통된 시각이다. 따라서 당장은 예상되는 핵심 리스크에 올바른 정책 대응을 통해 수요측면에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둔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다. 그나마 올 성장을 버텨준 것은 수출이었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반도체 경기 하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가 강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투자 회복도 시급하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높여 신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기업은 규제, 적폐대상이 아닌 성장과 고용의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좀 더 유연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거래 정상화를 회복해 건설투자의 과도한 위축도 방지해야 한다.

소비증가세 지속도 과제다.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상승보다는 쉬운 고용여건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소비진작책이다.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고용감소를 줄여야 한다.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대비로 금융 및 외환부문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금리인상이 주요 변수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대북문제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도 외국인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 부문으로 이는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이 급선무다. 방향이 옳다면 시차 효과를 감안하며 인내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을 온갖 규제와 감독으로 발목을 묶고 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 놓고 정부는 세금으로 과도한 복지를 퍼부어서 국민들을 나태와 의존의 유혹으로 몰아넣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급등시키고 있다. 노조 등 새로운 패권과 담합하고 기득권 세력에 포획돼 불균형을 방조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며 미래 성장동력을 잠식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 '나라 DOWN 나라'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하는 대안 정책으로 'i 노믹스'²⁾를 제시한 바 있다. 개인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핵심 성장요소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가 개인을 책임지겠다는 국가 포퓰리즘은 시대 역행적이다. 국가는 시장경제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i)가

2) i 노믹스의 'i'를 뜻하는 i는 idea(아이디어), initiative(주도), invention(창조), innovation(혁신)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포괄한다.

자유와 자율의 기반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initiative)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규제, 나태, 의존에 발목이 잡혀 뛰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마음껏 뛰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다시 그리고 새롭게 일으키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